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황여정 연구위원, hyj@nypi.re.kr

요약¹⁾

- 한국사회에서 저출산·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전개되면서,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사회에 갈등이 존재하는 것이 그 자체로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심각한 수준의 사회적 대립과 세대 간 갈등은 사회구성원 간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대 간 갈등을 예방하고 사회통합 수준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이를 위해 세대통합 관련 법령 및 정책을 분석하고, 국내·외 세대통합 교육프로그램 중 대표적인 사례를 선별하여 사례분석을 실시하였음. 또한 청소년의 세대갈등 및 세대통합 인식을 파악하고 세대통합역량 수준을 점검하기 위해, 전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아울러 정책담당 공무원, 교사, 청소년지도사 등 현장 전문가 대상 자문회의 등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하였음.
-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세대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다양한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제시하였음. 우선, 세대문제를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로 인식하고, 세대 관계를 일방적인 공여·전승에서 상호 호혜적 관계로 전환해야 함을 제안하였음.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세대통합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프로그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제안하였음. 아울러 세대통합 프로그램 운영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근본적으로 미래세대인 청소년이 정책 결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을 제안하였음.

1) 본고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년 고유과제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를 발체·요약한 것임.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전통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사회갈등에 관한 논의는 주로 이념갈등이나 지역갈등, 계층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음. 그러나 최근에는 선진국에 비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의 거대한 흐름과 맞물려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한국사회의 갈등 지형이 지역적, 이념적, 계급적 갈등을 넘어 세대갈등으로 급속히 이동한다는 분석(서용석·전상진, 2013:2)이 제기됨.
- ▶ 사회에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이 그 자체로 부정적인 것은 아님. 그렇지만 심각한 수준의 사회적 대립과 세대 간 갈등은 사회자본인 공적 신뢰의 붕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홍영란 외, 2015: 4).
 - 이러한 연유로 다양한 세대가 원활하게 소통하고 상호 이해하는 사회구조를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김미숙 외, 2012). 바로 이 같은 견지에서 세대통합의 필요성이 대두됨.
- ▶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세대 간 갈등을 예방하고, 세대통합을 증진함으로써 사회통합 수준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 이를 위해 우리나라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데 구체적인 연구목적이 있음.

2. 연구결과

▶ 세대통합 관련 법령 및 정책 분석 결과

- 세대통합 관련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와 체계를 검토하고 그간 추진된 세대통합 관련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기 위해, 관련 법령, 범부처 종합계획 및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을 검토하였음.
- 법령 분석 결과,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은 세대통합역량에 관해 직접적인 내용을 포함하지는 않지만,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요구되는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세대통합 교육 프로그램 실시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과 직결되는 내용은 「인성교육 진흥법」에 상당 부분 명시되어 있음. 동법의 시행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세대통합교육을 활성화 하는 데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분석되었음.
- 범부처 종합계획에 대한 분석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국민대통합 종합계획」,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2016-2020)」 등을 검토하였음. 그 결과, 세대 간 갈등이 부각되면서 최근 발표된 다양한 정책에 세대통합 관련 내용들이 광범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음. 또한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을 통해 학교에서 세대통합교육을 실시할 정책적 기반은 구축된 것으로 파악되었음.
- 구체적인 정책 분석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을 대상으로, 사업내용, 정책대상, 전달체계, 전달방식을 분석틀로 삼아 분석을 실시하였음. 그 결과, 청소년과 노인세대 간 소통과 교류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대단히 제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음. 따라서 향후 노인 세대와 청소년 세대가 함께하는 정책들이 보다 확충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사례분석 결과

- 본 연구에서는 사례 선정의 기준으로, ① '활동'중심성, ② 상호 호혜성, ③ 세대 간 대등한 관계 유지, ④ 적용가능성 및 확산가능성 등 4가지 기준을 설정하고,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사례를 선정하여 검토하였음. 본 연구에서 검토한 4가지 사례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는 <표 1>에 제시하였음.

[표 1] 세대통합 교육 및 프로그램 우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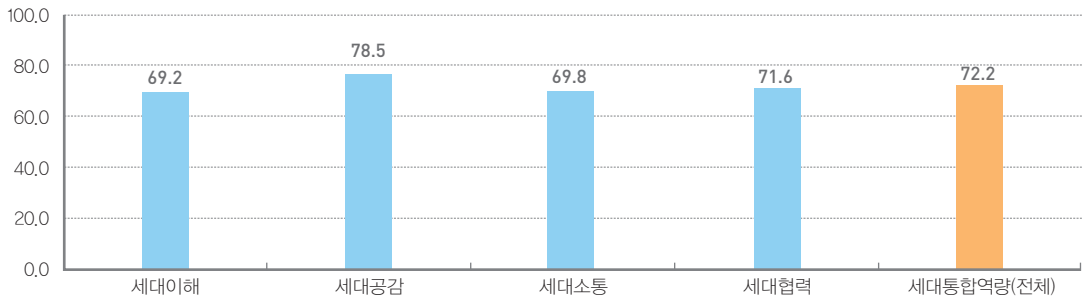
번호	대상 국가	사례명	주요 특징
1	영국	뉴캐슬언더라임 '세대 간 지역사회 실천' 프로그램	• 학교를 기반으로 운영 •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 노인문제 및 고령화 관련 전문 연구기관인 베스존슨재단에서 운영
2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세대통합 프로그램	• 연방정부 및 주정부 지원을 받아 추진 • 대학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3	세계 18개국	메모로(MEMORO)	• 세계 여러 나라에서 광범하게 시행 • 기업과의 연계 용이 • 한국에서도 시행 중이며, 자유학기제 및 청소년수련관과 연계 운영
4	한국	'동네한바퀴in종로구'	• 커뮤니티 매핑을 통한 주니어와 시니어 세대의 교류 • 서로 다른 세대가 대등한 역할 분담 • 지역사회 중심 프로그램

- 사례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첫째, 프로그램 내용 측면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단지 '접촉'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협력하는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임. 둘째, 영국, 미국, 일본, 한국 등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형태로 상이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지만, 이들 프로그램은 세대 간 문제를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바라본다는 공통점이 있었음. 셋째, 성공적인 프로그램은 기획과 운영 전반에 걸쳐 세심한 설계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음. 마지막으로, 다양한 자원과의 연계·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음.

▶ 중·고등학생 6,653명 대상 청소년의 세대통합 인식 및 세대통합역량 설문조사 결과

-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세대통합역량이 이해, 공감, 소통, 협력 등 4가지 요소로 구성되는 것으로 정의하였음. 세대통합역량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100점 만점으로 환산된 점수를 기준으로 할 때 세대통합역량 수준은 평균 72.2점을 나타내 청소년들은 살아온 시대와 경험이 다른 세대를 이해하고 공감·소통·협력하는 역량이 중간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영역별로는 공감 영역이 비교적 높은 편에 속했고, 이해와 소통 영역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노화와 노인의 특징, 노인세대가 살아온 삶과 우리 사회에 대한 기여 등 노인 세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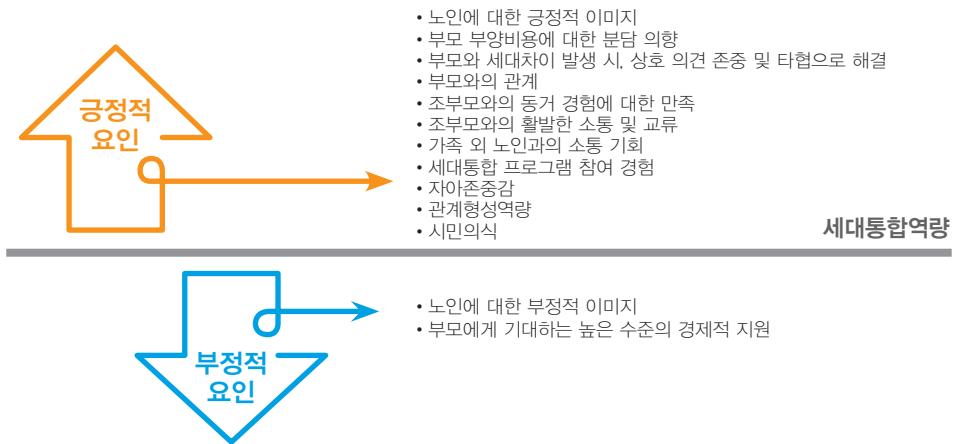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향후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노화와 노인에 대한 이해부터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주: 제시된 수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수치임.

【그림 1】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영역별 비교

- 세대통합교육 및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지금까지 학교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세대통합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17.2%에 불과했고,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82.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또한 학교 외 다른 기관에서 세대통합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23.8%로 파악되었음.
 - 프로그램(활동)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 일방적·수동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에 비해, 상호 호혜적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그 효과를 더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는 프로그램 참여 여부뿐만 아니라 참여 방식에 따라 세대통합교육의 효과가 달리 나타남을 시사함.
-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층모형(Multi-level modeling) 분석 결과,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것은 세대통합역량 증진에 도움이 되고 부정적 이미지를 갖는 것은 세대통합역량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예방하고 부정적 이미지를 완화하는 것이 세대통합역량 증진에 도움이 됨을 시사함.
 - 또한 노인 세대와의 소통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세대통합역량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세대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험이 무척 주효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었음.
 - 아울러 가족 내에서 부모-자녀 관계를 개선하고, 세대 간에 의견 충돌이 발생할 때 한쪽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따르게 하기 보다는 상호 의견을 존중하고 타협하는 경험이 청소년 세대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반면 부모가 자녀의 결혼비용까지 대부분 부담해주기를 바라는 등 높은 수준의 경제적 지원을 바라는 마음 등은 세대통합역량 증진에 걸림돌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 무조건 희생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비롯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부모 세대의 노년 준비의 필요성 등을 포함하는 올바른 가족관계 정립에 관한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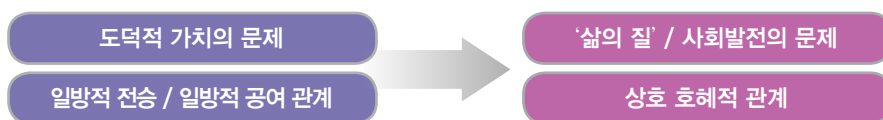


【그림 2】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영향요인 다층모형 분석 결과

3. 정책제언

▶ 정책과제 도출의 기본 관점과 방향

-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에서 세대통합이 필요한 이유는 더 이상 예(禮)나 효(孝)와 같은 도덕적 가치의 회복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이 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질’의 문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보았음.
- 이제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 세대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수의 고령세대와 함께, 다(多)세대의 사회를 살아가야 함. 노인세대 역시 젊은 세대와 함께 더 오랜 기간을 살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서로 다른 세대와의 상호작용은 불가피함.
- 그런데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은 너무나 많음. 따라서 세대 간 갈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세대통합역량을 갖추지 못한다면, 사회적으로도 분열에 따른 비용을 감수해야 하고, 사회구성원 개인의 측면에서도 불행할 수밖에 없음. 그러므로 서로 다른 세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상호 소통·공감·협력하는 태도와 역량이 필수적이라고 보았음.
- 또한 세대문제와 세대통합을 바라보는 기본 관점을 도덕적 가치에서 삶의 질의 문제로 전환하게 되면, 그에 따라 세대통합에서 지향해야 하는 세대 간 관계는 일방적 전승이나 공여가 아니라 상호 호혜적 관계로 재설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음.
- 웃어른에 대한 공경과 존중도 필요하지만, 바람직한 세대통합이 지향해야 할 세대 간 관계는 어느 한 세대의 일방적 희생이나 수혜를 담보로 해서는 안 되며, 상호 호혜적 관점을 지향해야 한다고 보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그림3】 세대문제를 바라보는 전통적 관점 대비 본 연구의 관점

- 상술한 기본 관점과 방향을 토대로, 정책 추진 기반 구축, 세대통합 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계 구축, 담당 인력 양성 및 전문성 확보 지원, 정책 결정 환경 조성 등 5가지 영역에 걸쳐 다음과 같은 세부추진과제를 제시하였음.

<표 2> 영역별 주요 정책과제

대영역	소영역	세부 정책과제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 기반 구축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반영을 통한 세대통합정책 확산	-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에 세대통합내용 반영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반영 및 피드백
세대통합 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학교교육 연계	교과수업 및 체험활동 등 정규 교육과정과의 연계	- 교과수업과 연계한 세대통합 교육 실시 - 창의적 체험활동 및 동아리활동과 연계한 세대통합 프로그램 운영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공유 지원	-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공유 시스템 구축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 세대통합포럼(가칭) 구성 및 운영
	세대 간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 공유	- 청소년수련시설의 다(多)세대 이용 - 마을자원목록 제작 및 공유
세대통합 프로그램 운영 인력 양성 및 전문성 확보 지원	현장 전문가 대상 세대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연수 실시	- 교원 대상 세대통합 연수 실시 - 청소년 지도사 대상 세대통합 연수 실시
	세대통합 프로그램 확산을 위한 세대교류기획자 양성	- 유관 학과 대학(원)생 대상 세대교류기획자 양성 과정 운영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 결정 환경 조성	세대 간 균형 유지를 위한 미래세대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	- 정책결정 과정에 청소년 참여 확대

▶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에 세대통합내용 반영

- 향후 청소년정책에서 세대문제에 지속적으로 정책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적용되는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 청소년들의 세대통합역량, 나아가 갈등관리 역량 함양에 관한 정책과제들이 개발되어 반영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음. 특히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중장기 정책계획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 필요성이 제기됨. 한국처럼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세대문제는 급속히 심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 이에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는 ‘청소년의 통합적 역량(혹은 갈등관리역량) 강화’를 중점 과제의 하나로 개발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세부과제로 ‘세대통합역량 함양’, ‘세대 간 소통·교류 프로그램 확대’, ‘지역사회와 연계한 세대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등의 추진과제들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안함.

▶ 교과수업과 연계한 세대통합 교육 실시

- 본 연구에서 검토한 세대통합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대단히 일관되게 세대통합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세대통합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였음. 실제로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에서도 세대통합교육 또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다른 세대에 대한 이해, 공감, 소통, 협력 등 세대통합역량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대통합 교육 및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핵심적인 방안이라고 보았음.
-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세대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데는 학교 전달체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임. 또한

학교를 통한 확산은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도 유리함. 학교에서 세대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교과수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일 것임. 본 연구에서 실시한 현장 교사 대상 의견조사에서도 교사들은 세대통합교육은 교과수업과 연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내용적 측면에서도 충분히 교육과정에 재구성하여 반영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과수업과 연계하여 세대통합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안하였음. 교과수업과 연계하는 방법은 별도의 특별활동 형태로 실시하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연속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고,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함(이상준 외, 2015: 66). 어떤 교과와 연계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초·중·고 교육과정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기술·가정’, ‘윤리’, ‘사회’ 교과에서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음.

▶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 본 연구에서는 현장에서 세대통합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학교를 비롯한 청소년시설이나 지역사회 기관들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세대통합 프로그램 교수·학습모형과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음.
- 교수·학습자료 개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인 추진 방법으로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인성역량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공모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 교육부는 2016년 인성교육 시행계획에서 ‘2-2. 학생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도 제고’를 뒷받침하는 세부과제의 하나로 ‘인성역량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을 포함하였음. 본 연구에서는 해당 사업과 연계하되, 공모 대상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구체적으로, 운영 주체를 ‘학교’에 국한하기보다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응모할 수 있도록 하고, 주제 측면에서는 ‘세대통합’ 부문을 신설하여 청소년과 중장년, 노인세대와의 소통·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별도 선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 세대통합포럼(가칭) 구성 및 운영

- 본 연구에서 검토한 해외 사례 중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세대통합 프로그램 사례는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니즈를 고려한 맞춤형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세대통합포럼을 운영한 성과를 보여주었음. 여기에서는 이 같은 모델을 준용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세대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및 세대통합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가칭)「세대통합포럼」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표 3> (가칭) 세대통합포럼 운영 방안(안)

항목	내용
목적	•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세대통합 프로그램 개발
기능	•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 및 자원들이 참여하여 세대통합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시 자원 연계 • 세대통합 프로그램 및 정책 관련 아이디어 도출
구성	• 지자체, 청소년 시설, 노인 시설, 지역사회 복지시설 관계자 등 • 유아·아동 보육/교육기관, 초·중·고등학교, 대학 및 평생교육시설 등 •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 고용, 주거, 생활체육, 경제단체, 기업 관계자 등
운영방안	• 아이디어 산출 및 세대통합 정책과 프로그램에 적용할 지역사회 이슈에 대한 토론 • 제기된 이슈 해결에 적용 가능한 세대통합적 접근 방법 논의 - 특정 세대의 일방적 주도가 아닌, 다양한 세대의 상호 협력 방안 모색 - 지속적인 협력 방안 도출

▶ 유관 학과 대학(원)생 대상 세대교류기획자 양성 과정 운영

- 세대통합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고, 자유학기제나 방과후학교와 연계되어 운영될 경우, 이를 지원할 인력이 필요함.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대통합 프로그램 확산을 위해, 세대교류기획자를 양성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함.
-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검토한 국내 사례 중 만안청소년수련관 사례를 참조할 수 있음. 만안청소년수련관에서는 인근 대학의 청소년학과 및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대교류 문화기획자' 양성 과정을 운영하였음. 그 결과, 2016년 대학생 20명을 세대교류문화기획자로 양성하여 관내 2개 학교와 연계하여 실시하는 자유학기제 세대공감 프로젝트의 강사로 투입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모델을 준용하여, 유관 전공 대학(원)생을 세대교류기획자로 양성하여, 학교의 자유학기제, 방과후학교를 비롯해 청소년시설에서 운영되는 세대통합 프로그램 운영(지원)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함. 대학(원)생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일정 시수 이상 기획자로 활동한 경우에는 학점 이수를 인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 정책결정 과정에 청소년 참여 확대

- 세대 간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지려면, 협력이 가능한 구조가 조성되어야 함.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고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정책결정 과정에 미래세대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함을 제안함.
- 청소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미래를 결정해놓고, 그로 인해 야기되는 변화를 오히려 수용하라는 것은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과 갈등의 요소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김희삼·김순희(2016:1)는 세대 간 상생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이 현세대 중심으로 결정되는 거버넌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미래세대를 배려한 참여적 거버넌스를 발전시키는 것이 저성장·고령화 시대에 증가할 세대 간 갈등 완화를 위한 선결 과제라고 주장하였음.
- 본 연구에서도 이 같은 관점에 동의하면서, 청소년들이 세대 간 갈등이나 대립이 예측되는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함. 정책결정 과정에 청소년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속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활용을 검토할 수 있음. 이 방법은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시민 모임의 속의과정을 정책적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것임(김희삼·김순희, 2016).
- 이러한 속의(熟議) 방식을 실제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하여, 청소년과 같이 미래세대의 의견이 정책결정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현재 국내에서 적용 중인 청소년참여예산제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의 제도를 보다 활성화 하고, 실효성을 갖도록 하는 것도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참고문헌

- 김미숙 · 김상욱 · 강신욱 · 정영호 · 김안나 · 조명래 · 이주연 · 하태정(2012). 사회통합 중장기 전략 개발 연구. 서울: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
- 김희삼 · 김순희(2016).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의 개선방향. KDI FOCUS 통권 제68호.
- 서용석 · 전상진(2013). 세대 간 갈등이 유발할 미래위험 관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이상준 · 오승모 · 홍영란 · 이덕주 · 박영진 · 남효정 · 최한나(2015).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세대공감교육 활성화 방안.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홍영란 · 김태준 · 박종효 · 이현주 · 황여정 · 조민지(2015).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 · 정보체제 개선 전략 연구(Ⅲ): 개선 방안 및 추진 전략. 서울: 한국교육개발원.